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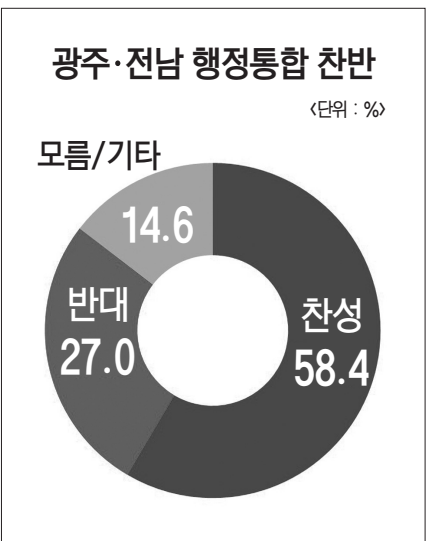
# 행정통합...산업·일자리·공공기관 유치 경제활력 기대

광남일보·KBC 공동, 광주·전남 통합 찬반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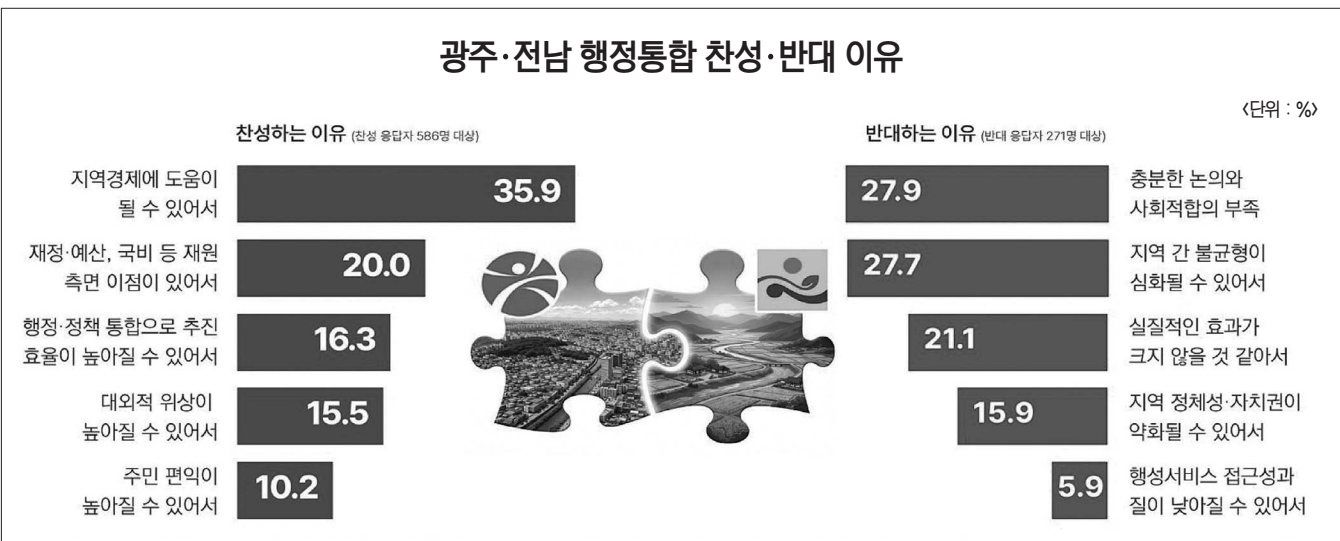
시·도민 58.4% ‘찬성’...‘반대’ 27%  
40대 이상 찬성·30대 이하 반대 높아  
충분한 논의·사회적 합의 부족 우려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 58.4%가 찬성하고, 27%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민들은 행정통합으로 산업·일자리·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경제적 기대감을 보인 반면,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4일 광남일보·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통합에 대해서 시도민 58.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7.0%였다.  
모름이나 기타는 14.6%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은 찬성이 59.1%로, 광주(57.6%)보다 1.5%p 다소 높았다.  
반대는 광주(30.0%)가 전남(24.6%)보다 5.4%p 높게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65.5%)이 여성(51.4%)보다 찬성이 높았으며, 반대는 여성(29.8%)이 남성(24.1%)보다 많았다.  
세대별로는 ‘70대+’에서 찬성이 72.2%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 71.0%, 60대 68.2%, 40대 53.8% 순이었으면, 반대는 30대와 18/20대에서 각각 43.9%, 42.1%를 보여, 청년층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



아 차이를 보였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찬성이 각각 65.6%, 63.0%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 (56.6%)가 더 컸다.  
권역별 행정통합 찬성 응답은 광주에서는 남구가 60.6%로 가장 높았고, 동구 59.1%, 서구 57.6%, 북구 57.2%, 광산구



55.8%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광주근교권의 찬성이 70.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동부권 58.5%, 서남권 53% 순이었다.  
시도민은 행정통합 찬성 이유로 산업·일자리·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경제 도움 (35.9%)을 최우선으로 답했다.  
이어 재정·예산 확보나 국비 지원 등

재원 측면 이점 (20.0%), 광역 단위로 행정·정책을 통합해 추진 효율 제고 (16.3%), 광역 경쟁력과 대외적 위상이 제고 (15.5%), 행정서비스의 표준화·연계 등 주민 편의 제고 (10.2%) 순이었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행정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

(27.9%), 특정 지역으로 가능·예산 쏠림 등 지역 간 불균형 심화 (27.7%),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 (21.1%), 지역 정체성·자치권이 약화 (15.9%), 행정체계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질이 저하 (5.9%) 등을 우려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는 4일 화순전남대병원 김재봉총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응급환자 이송지침 간담회’에서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 광주시,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한번에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 구축...21개 의료기관 연결  
환자 이송·전원·최종치료 연계...‘응급실 뺑뺑이’ 제로화

광주시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구축해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 최적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이송부터 병원 간 전원까지 지원하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현장에 도입, 고도화했다.

플랫폼은 700여개 항목에 달하는 응급의료 자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병상 현황, 의료진·장비 보유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광주 전역의 응급의료 자원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환자 이송과 치료 결정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는 평가다.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은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현재 수술 가능 병원, 가용 병상 여부, 응급실 대기 환자 수, 이송 중인 환자 위치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1개 응급의료기관이 하나의 병원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응급 환자는 응급실 도착 즉시 보다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플랫폼 내 ‘환자 전원 기능’을 통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지체 없이 연동된다.  
시는 특히 본초를 다루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해 ‘광주시 응급환자 이송지침’과 플랫폼을 연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팀’ 체계도 새롭게 마련했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Pre-KTAS 1, 2)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급 6개 의료기관 당직의사가 공동 대응한다. 다수 전문의가 함께 의사 결정을 통해 적정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도록 해 ‘응급실 뺑뺑이’를 사실상 제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응급실 과밀과 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시는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1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를 열고, 지난해 12월까지 사용자 실습 교육과 현장 교육을 마쳤다. 앞으로는 선도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이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연계·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의 협력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응급환자 이송지침 간담회’에서도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시스템”이라며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리를 넘어 전국 표준 응급의료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보성·영광·장성군수, 與예비후보적격심사서 제외 기초단체장 후보 등 8명...48시간 이내 이의신청·공판위로 이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예비후보자격심사에서 전남 군수 3명이 제외되면서 계속 심사 대상에 오르는 등 경선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심사결과, 민주당 전남지역 입지자 심사서 551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하고 102명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정밀 심사 대상으로 이관했다.  
주요 계속 심사 대상은 현역 단체장 중에서 김철우 보성군수와 장세일 영광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등이다.  
여수에서는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 고흥에서는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과 안정민 전 고흥군체육회장이 제외됐다.  
순천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한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 영암에서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가, 강진에서는 차영주 전남도위원과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흥에서는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과 안정민 전 고흥군체육회장이, 완도에서는 김신 전 완도군의원이, 화순은 문항주 전

전남도위원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비후보 적격심사에서 제외된 이들은 48시간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정밀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심사서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나주시의원 9명 대부분은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당은 지난해 4월 이들에 대한 비상 징계를 중앙당에 요청했으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 후보 1명과 광역의원 후보 3명, 기초의원 후보 3명, 비례대표 신청자 1명 등 8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들 8명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 자격심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탈락한 것이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하면 정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예비후보들의 범칙 경력이나 탈당, 해당 행위 등 소명이 제대로 안된 경우 정밀 심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장흥·무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인허가 등 혜택 기대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에서 전국 5개소 중 장흥군과 무안군 2개소가 선정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장흥군과 무안군 육성지구 임대형 스마트팜은 2028년까지 개소당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 시설로 구축될 예정이다.  
육성지구 선정 혜택은 인허가 의제(관련 시설 건립 간소화), 공유재산법 특례(수의계약·20년 장기임대·대부료 50% 감면·영구시설물축조) 등 사업추진 시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등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  
앞서 전남도와 시군은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을 위해 사전 협의

회를 갖고 서류 및 사업대상지 현장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방법, 사업추진 역량, 대상 지역의 입지 조건, 주변 현장 여건, 스마트농업 확산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전남도는 그동안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 155명을 양성·수료하는 등 청년 인재 육성에 만을 지속적으로 구축했다.  
이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교육, 실습, 영농 정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스마트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농업인이 저비용으로 첨단재배기술을 경험하고 영농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으로, 데이터 기반 재배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실습·교육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광주·전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금품선거’ 단속 명절선물 수수 시 최대 50배 과태료 부과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선거관리 당국이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차단에 고삐를 끈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금품 제공과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제고와 지지 기반 확대를 노린 금품 제공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

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법에 따르면 위법하게 제공된 금품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당내 경선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도 경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정치자금을 기부·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조작 역시 중대 위법행위다.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착신전환 등을 통해 동일인이 여러 차례 응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